"가스요금 인상 필요… LNG 도입가 낮춰 전기료 안정시켜야"

〈액화천연가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간담회
고유가 땐 미수금 최대 4조 증가
원료비 1원 인상 땐 年 5000억 회수
현물 의존 줄이고 장기계약 확대
해외 지분물량 200만t 추가 확보
트레이딩 강화로 구매 경쟁력 제고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스공사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가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다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요금 정상화를 통해 재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을 낮추는 구조적 개선도 강조했다. 가스 도입가격이 전력시장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LNG 구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전기요금 안정과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홍 사장은 18일 산업통상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가스요금을 너무 억제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쓰시면 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민수용 원료비를 메가줄(MJ)당 1원 인상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미수금 회수 효과가 발생한다. 연간 민수용 판매물량 약 5000억MJ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반면 현재와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올해 1분기 대비 내년 1분기 미수금이 최대 4조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요금 억제로 원료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사장은 요금 인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요금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좀 올릴 때는 올려주는 게 맞다"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급 문제도 있는 만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LNG 도입가격 경쟁력이다. 가스 도입가격이 전력시장가격과 직결되는 만큼 LNG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전 부채의 절반 이상은 가스 도입가격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스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NG 도입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홍 사장의 구상이다.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계약 중심으로 도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한편 해외 가스전 지분투자와 트레이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수급계획을 개선한다. 가스공사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부터 기존 기준수요 외에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급관리수요'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물량을 기간계약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수요와 발전원 구성 변화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안정적인 도입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트레이딩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홍 사장은 "가스공사가 필요한 물량을 예측해 현물시장에 뛰어가면 국제 시장에서는 이미 가스공사가 물건을 사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린다"며 "부족할 때 현물시장에서 비싼 물량을 사오는 재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레이딩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정부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트레이딩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리스크 테이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홍 사장은 트레이딩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능동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지분물량 확대도 추진한다. 홍 사장은 현재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물량이 약 100만 톤(t) 수준이며, 이를 2031년까지 약 500만 t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지분물량을 확보하면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물량을 들여오거나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LNG 도입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동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 사장은 올해 LNG 도입의 중동 의존도가 약 26%이며, 2년 뒤에는 18%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사장은 "석유와 가스는 태생은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다른 놀이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방향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기업인 석유공사와 비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통합 과정에서 주주 이익과 해외 사업 파트너, 금융기관과의 계약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홍 사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일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LNG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유연성 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원끼리 경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어떤 에너지가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기업, AI·가상자산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공정위, 계열사 변동 현황 공개
최근 3개월간 60곳 편입·65곳 제외
유사 기능 법인 통폐합해 경영 효율화

국내 대기업집단들이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 인수를 활발히 벌이는 한편, 유사 기능 법인들을 통폐합하며 군살 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6년 8월~10월)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기준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총 3529개사로, 지난 8월 초(3534개 사)보다 5개 사가 순감소했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집단은 총 47개였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4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새롭게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28개 집단에서 65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이 많은 곳은 한화(6개), 코오롱(4개), 신세계·SK(각 3개) 순이었으며, 계열 제외는 SK(11개), 카카오(8개), CJ(5개) 순으로 많았다.

이번 소속회사 변동을 보면, 우선 AI·데이터 및 디지털 금융 등 미래 성장동력 영입이 두드러졌다. 신세계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에스에스지에이아이코리아 등 2개 사를 계열 편입했다. 미래에셋은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엑스' 운영사와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를 계열 편입했다.

또 소규모·유사 기능 법인들을 통합해 경영과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계열 제외가 두드러졌다. SK는 복지 관련 자회사인 행복나무 등 5개 사를 행복모아와 행복한울로 각각 흡수합병해 조직을 정비했다. CJ 역시 제작 자회사 넥스트씬과 제이에스픽쳐스를 각각 스튜디오드래곤과 화앤담픽쳐스로 합병해 동종 업종 간 시너지를 도모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관련 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과 계열 제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한화(4개 사)와 KT(2개 사) 등이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를 신규 편입한 반면, GS와 롯데 등은 관련 법인을 청산 종결해 부동산 개발 회사를 계열 제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케냐에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노하우 전수

농어촌공사, 현지 공무원 현장교육
농업용수 공급·지하수 관리법 공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케냐 공무원을 초청해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 11~12일 기간 한국을 방문한 케냐 물위생관개부 및 지하수 교육훈련센터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가 주관하는 '케냐 물안보 역량 강화 초청연수'에 참가했고, 농어촌공사가 현장 교육을 맡았다.

케냐는 기후변화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정책 수요에 맞춰 한국의 농업용수·지하수 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1일에는 농업용수 확보·저장·관개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경기 의왕 왕송저수지와 경기 화성 화옹지구 양수장, 수질개선 시설 등을 찾아 농업용수 공급과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봤다.

12일 교육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과 디지털 관리기술이 소개됐다. 공사는 지하수 광역화와 지하수 댐 사업을 소개하고 공공관정 관리시스템과 재해예방 계측시스템을 시연했다. 지하수 관측자료를 활용한 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도 공유했다. 연수에 참가한 케냐 물위생관개부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케냐의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체코 원전 공정 지연 막기 위해 집중 점검

산업부,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
시공사 교체에 따른 사업 차질 방지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사업 추진 현황을 주간 단위로 집중 점검하고 체코 측과의 소통 강화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동일 차관 주재로 제2차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체코 두코바니 5·6호기(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달부터 가동된 산업부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차관 주재 1차 점검회의와 12일 장관 주재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점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최종 종료하고,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선정 ▲신규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2026년도 주간 단위 세부관리계획을 보고했다. 한수원 측은 11월 3주 차까지 예정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정상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참석한 박동일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의 공조 체계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 5일 열린 한-체코 산업통상부 국장급 회의 참석을 비롯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한 체코 발주사(EDUII)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I 윤리 실천으로 공공서비스 신뢰 강화

근로복지공단, 7대 실천원칙 수립

근로복지공단이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마크는 공공기관의 윤리적 AI 개발·활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증한다.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임직원이 AI 윤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부여한다.

공단은 인간의 존엄성, 공공선, 지속가능성을 3대 핵심 가치로 하는 'AI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또한 AI 과의존 경계·개인정보 보호·공정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을 7대 실천원칙으로 정해 임직원이 업무에서 지켜야 할 기준도 구체화했다.

AI 윤리헌장과 7대 실천원칙을 전국 소속기관에 공유했고, 전 임직원의 99.5%가 AI 윤리교육을 수료했다. 또 임직원이 업무에서 지킬 원칙을 한 줄로 적는 '나의 AI 윤리 한 줄 약속' 캠페인도 진행해 AI 윤리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캠페인 등 AI 윤리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